

청 주 지 방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1나4057 관리비
원고, 피항소인 ○○○○○관리회
청주시
송달장소 청주시
대표자 ○○○
피고, 항소인 ◎◎◎
청주시
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1. 7. 5. 선고 2010가소55600 판결
변 론 종 결 2012. 8. 28.
판 결 선 고 2012. 10. 9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 747,876원 및 그 중 157,272원에 대하여는 2011. 7. 6.부터, 590,604원에 대하여는 2012. 1. 5.부터 각 2012. 10. 9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- 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3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870,001원 및 그 중 560,442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부 터, 1,309,559원에 대하여는 2012. 1. 2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 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 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, 19 내지 22, 30, 38 내지 42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청주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○에 있는 ○○○○○빌딩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은 30개의 전유부분(면적 합계 5997.6㎡)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 는 25명이고,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○○○호의 세입자이다.

나. 원고는 2010. 4.부터 2011. 12.까지 피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1,870,001원의 관리비(이하 '이 사건 관리비'라 한다)를 부과하였으나,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.

| 기간 | 관리비(원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2010. 4.~5. | 91,113 |
| 2010. 6. | 54,092 |
| 2010. 7. | 59,673 |
| 2010. 8. | 73,744 |
| 2010. 9. | 104,724 |
| 2010. 10. | 63,324 |
| 2010. 11. | 109,601 |
| 2010. 12. | 66,965 |
| 2011. 1. | 123,829 |
| 2011. 2. | 97,086 |
| 2011. 3. | 61,400 |
| 2011. 4. | 57,860 |
| 2011. 5. | 97,362 |
| 2011. 6. | 102,139 |
| 2011. 7. | 99,354 |
| 2011. 8.~9. | 149,207 |
| 2011. 10. | 222,563 |
| 2011. 11. | 94,174 |
| 2011. 12. | 141,791 |
| 합계 | 1,870,001 |

다. 원고의 대표자 ○○○은 2010. 5. 10.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, 2012. 7. 10.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재선임되었다.

2.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, 원고의 대표자인 ○○○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재선임한

2010. 5. 10.자 및 2012. 7. 10.자 관리단집회는 모두 적법한 소집절차 및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, 이 사건 소는 관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관계법령의 규정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 한다)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.

제12조(공유자의 지분권)

-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

제23조(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)

-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.

제24조(관리인의 선임 등)

-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(선임)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.

제33조(임시 관리단집회)

-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정수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37조(의결권)

-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.

제38조(의결 방법)

-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

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- ②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.

제39조(집회의 의장과 의사록)

-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. 다만,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1조(서면에 의한 결의 등)

-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다. 판단

(1) 판단의 기준

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,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45496 판결 참조). 그리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(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).

(2) 2010. 5. 10. 관리단집회의 효력

2010. 5. 10. 개최된 관리단집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○○○이 적법한 결의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

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, 2,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(3) 2012. 7. 10. 관리단집회의 효력

(가) 갑 제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이 사건 건물 중 ○○○호의 세입자인 ○○○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자신을 재선임하고 관리비(2010. 5.부터 2012. 6.까지)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등의 안전(이하 '이 사건 안전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2. 7. 10.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안내서를 작성하여,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115.86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61.72㎡), *** (○○○ · ○○○호, 전유면적 합계 390.03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297.91㎡) 으로부터 집회소집동의란에 서명을 받고, *** (○○○ · ○○○ · ○○○호, 전유면적 합계 491.75㎡) 과 *** (○○○ · ○○○ · ○○○호, 전유면적 합계 686.21㎡) 으로부터도 위 집회소집동의를 받아, 이 사건 건물의 입점주들에게 위 소집안내서를 배부하였다.

2) 이 사건 안전에 관하여,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59.92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61.72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115.86㎡), *** (○○○ · ○○○호, 전유면적 158.43㎡), *** (○○○ · ○○○ · ○○○호, 전유면적 합계 491.75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173.25㎡), *** (○○○ · ○○○ · ○○○호, 전유면적 합계 686.21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216.78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256.48㎡), *** (○○○ · ○○○호, 전유면적 합계 390.03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297.91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252.52㎡), *** (○○○호, 전유면적 170.95㎡) 은 서면으로 찬성

의사를 표시하였다.

3) 2012. 7. 10. 개최된 관리단집회에는 ○○○ 외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***, ***, ***이 참석하여, ○○○으로 하여금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였고, ○○○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명(전유면적 합계 3,674.85㎡)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전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.

(나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2012. 7. 10.자 관리단집회는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1/5 이상(6명/25명) 및 의결권의 1/5 이상(2043.48㎡/5997.6㎡)의 동의를 받아 소집되어, 구분소유자의 과반수(13명/25명) 및 의결권의 과반수(3331.81㎡/5997.6㎡)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전이 가결되었으므로, 이로써 원고의 대표자인 ○○○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(4)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1,870,0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피고의 주장 요지

(가) 원고는,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청주시로부터 부과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과다하게 이를 부과하였고, ② ○○○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원 송달료나 사무용품 구입비를 관리비에 포함시키고, 자신의 관리인 자격을 다투는 입점주들에 대하여는 청소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으며,

③ 소방정기검사비로 2010. 10. 787,767원을 부과하고서도 2010. 12. 또 다시 605,000원을 부당하게 부과하였고, ④ 입점주들과 상의도 없이 과도한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, 피고에 대한 관리비 가운데 수도요금 중 110,000원, 전기요금 중 100,000원, 공사비 중 100,000원, 청소비 중 50,000원, 사무용품 구입비 중 30,00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.

(나) 피고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합계 1,211,750원을 납부하였으므로, 이 사건 관리비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.

(2) 판단

(가)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

1)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분

갑 제11, 23 내지 25, 30호증, 을 제15,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2010. 4.부터 2011. 12.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청주시로부터 부과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, 원고가 입점주들에게 부과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, 그 사이의 차액, 피고에 대한 개별 부과액, 위 차액에 대한 피고 부과부분 상당액¹⁾은 아래의 표와 같다.

가) 전기요금

| 기간 | 한국전력공사 고지액 | 전체 부과액 | 차액 | 피고 부과액 | 차액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2010. 4. | 655,420 | 1,175,939 | 11,979 | 43,694 | 445 |
| 2010. 5. | 508,540 | | | | |
| 2010. 6. | 632,460 | 632,160 | -300 | 23,405 | -11 |
| 2010. 7. | 767,870 | 767,870 | 0 | 29,146 | 0 |
| 2010. 8. | 968,290 | 968,290 | 0 | 36,733 | 0 |
| 2010. 9. | 907,470 | 907,470 | 0 | 34,432 | 0 |

1) 전체 차액 × (피고 부과액 / 전체 부과액)

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2010. 10. | 662,170 | 662,170 | 0 | 24,651 | 0 |
| 2010. 11. | 650,190 | 650,190 | 0 | 35,169 | 0 |
| 2010. 12. | 943,680 | 1,027,150 | 83,470 | 37,429 | 3,041 |
| 2011. 1. | 1,005,570 | 1,032,470 | 26,900 | 38,072 | 991 |
| 2011. 2. | 1,010,890 | 1,005,570 | -5,320 | 36,610 | -193 |
| 2011. 3. | 836,500 | 836,500 | 0 | 29,952 | 0 |
| 2011. 4. | 739,410 | 739,410 | 0 | 27,719 | 0 |
| 2011. 5. | 604,320 | 604,320 | 0 | 22,512 | 0 |
| 2011. 6. | 814,830 | 814,830 | 0 | 30,190 | 0 |
| 2011. 7. | 811,580 | 811,580 | 0 | 30,028 | 0 |
| 2011. 8. | 678,310 | 1,816,190 | 0 | 67,516 | 0 |
| 2011. 9. | 1,137,880 | | | | |
| 2011. 10. | 673,900 | 673,900 | 0 | 24,882 | 0 |
| 2011. 11. | 776,350 | 776,350 | 0 | 28,759 | 0 |
| 2011. 12. | 922,860 | 922,860 | 0 | 34,268 | 0 |
| | 합계 | | | 635,167 | 4,273 |

나) 수도요금

| 기간 | 청주시 고지액 | 전체 부과액 | 차액 | 피고 부과액 | 차액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2010. 4. | 647,310 | 1,391,390 | 0 | 47,419 | 0 |
| 2010. 5. | 744,080 | | | | |
| 2010. 6. | 638,390 | 619,810 | -18,580 | 13,375 | -400 |
| 2010. 7. | 694,950 | 674,720 | -20,230 | 14,824 | -444 |
| 2010. 8. | 842,120 | 779,080 | -63,040 | 21,308 | -1,724 |
| 2010. 9. | 802,430 | 802,430 | 0 | 21,995 | 0 |
| 2010. 10. | 957,840 | 929,950 | -27,890 | 22,970 | -688 |
| 2010. 11. | 623,510 | 651,400 | 27,890 | 24,336 | 1,041 |
| 2010. 12. | 663,160 | 663,160 | 0 | 26,062 | 0 |
| 2011. 1. | 645,820 | 957,840 | 312,020 | 40,727 | 13,266 |
| 2011. 2. | 605,360 | 605,360 | 0 | 15,310 | 0 |
| 2011. 3. | 569,930 | 645,820 | 75,890 | 15,745 | 1,850 |
| 2011. 4. | 555,040 | 605,360 | 50,320 | 14,438 | 1,200 |
| 2011. 5. | 610,890 | 623,510 | 12,620 | 14,185 | 287 |
| 2011. 6. | 663,160 | 772,355 | 109,195 | 18,428 | 2,605 |
| 2011. 7. | 749,860 | 957,840 | 207,980 | 18,764 | 4,074 |
| 2011. 8. | 868,960 | 1,561,020 | 0 | 31,002 | 0 |
| 2011. 9. | 692,060 | | | | |
| 2011. 10. | 567,790 | 567,790 | 0 | 11,997 | 0 |
| 2011. 11. | 593,800 | 593,800 | 0 | 17,968 | 0 |
| 2011. 12. | 567,790 | 567,790 | 0 | 16,114 | 0 |
| | 합계 | | | 406,967 | 21,067 |

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요금 초과부과액 4,273원, 수도요금 초과부과액 21,067원은 감액되어야 하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2) 법원 송달료, 사무재료비, 청소비 부분

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0. 4.부터 2011. 12. 까지 피고에게 부과한 사무재료비(청소용품, 화장지, 복사비, 잉크, 종이 등)와 청소비는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, 관리비의 각 항목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, 원고는 사무재료비가 구체적으로 지출된 내역 및 청소비가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, 갑 제14, 28 호증,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○○○과 주식회사 ○○○○환경, 원고와 다른 몇몇 입점주들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진 사실, 원고가 고용한 청소부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무재료비와 청소비를 모두 정당한 관리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, 피고에게 부과된 사무재료비 합계액 67,777원 중 피고가 자인하는 37,777원(= 67,777원 - 30,000원), 청소비 합계액 206,256원 중 피고가 자인하는 156,256원(= 206,256원 - 50,000원)만 인정하기로 한다.

| 기간 | 사무재료비 | | 청소비 |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전체 부과액 | 피고 부과액 | 전체 부과액 | 피고 부과액 |
| 2010. 4.~5. | 0 | 0 | 0 | 0 |
| 2010. 6. | 0 | 0 | 0 | 0 |
| 2010. 7. | 0 | 0 | 0 | 0 |
| 2010. 8. | 0 | 0 | 0 | 0 |
| 2010. 9. | 0 | 0 | 0 | 0 |
| 2010. 10. | 0 | 0 | 0 | 0 |
| 2010. 11. | 375,690 | 12,522 | 0 | 0 |

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2010. 12. | 0 | 0 | 0 | 0 |
| 2011. 1. | 0 | 0 | 0 | 0 |
| 2011. 2. | 0 | 0 | 0 | 0 |
| 2011. 3. | 0 | 0 | 0 | 0 |
| 2011. 4. | 0 | 0 | 0 | 0 |
| 2011. 5. | 481,300 | 16,042 | 800,000 | 28,920 |
| 2011. 6. | 266,980 | 8,898 | 800,000 | 28,920 |
| 2011. 7. | 178,200 | 5,939 | 800,000 | 28,920 |
| 2011. 8.~9. | 182,000 | 6,066 | 800,000 | 28,920 |
| 2011. 10. | 120,100 | 4,141 | 800,000 | 30,192 |
| 2011. 11. | 45,000 | 1,552 | 800,000 | 30,192 |
| 2011. 12. | 365,930 | 12,617 | 800,000 | 30,192 |
| 합 계 | 2,015,200 | 67,777 | 5,600,000 | 206,256 |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3) 소방정기검사비 부분

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관리비 중 소방정기검사비 명목으로 2010. 10. 787,767원, 2010. 12. 605,000원을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갑 제26호증, 갑 제30호증의 5,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0. 10. 전기정기검사비로 787,767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이를 소방정기검사비라 잘못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4) 공사비 부분

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 2011. 2. 473,000원, 2011. 3. 815,030원, 2011. 10. 3,638,500원, 2011. 12. 250,000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나, 한편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2011. 11. 1.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에 관한 결의와 관리비 정산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가

위 기타 항목에 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(나)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

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05호에 관하여 2012. 8. 8. 한
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862,110원을, 2012. 8. 10. 청주시에 수도요금 349,640원을 각
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, 이 사건 관리비 중 피고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전기
요금은 630,894원(= 635,167원 - 4,273원)이고, 수도요금은 385,900원(= 406,967원 -
21,067원)이므로, 피고는 이들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.

(다) 소결론

위에서 본 판단을 모두 종합하면, 이 사건 관리비 중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
할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747,876원이 됨을 알 수 있다.

| 기간 | 부과된 관리비 | 정산내역 | | | | 정산 후 금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| | 전기요금 | 수도요금 | 사무재료비 | 청소비 | |
| 2010. 4.~5. | 91,113 | -43,694 | -47,419 | 0 | 0 | 0 |
| 2010. 6. | 54,092 | -23,405 | -13,375 | 0 | 0 | 17,312 |
| 2010. 7. | 59,673 | -29,146 | -14,824 | 0 | 0 | 15,703 |
| 2010. 8. | 73,744 | -36,733 | -21,308 | 0 | 0 | 15,703 |
| 2010. 9. | 104,724 | -34,432 | -21,995 | 0 | 0 | 48,297 |
| 2010. 10. | 63,324 | -24,651 | -22,970 | 0 | 0 | 15,703 |
| 2010. 11. | 109,601 | -35,169 | -24,336 | -5,542 ²⁾ | 0 | 44,554 |
| 2010. 12. | 66,965 | -37,429 | -26,062 | 0 | 0 | 3,474 |
| 2011. 1. | 123,829 | -38,072 | -40,727 | 0 | 0 | 45,030 |
| 2011. 2. | 97,086 | -36,610 | -15,310 | 0 | 0 | 45,166 |
| 2011. 3. | 61,400 | -29,952 | -15,745 | 0 | 0 | 15,703 |
| 2011. 4. | 57,860 | -27,719 | -14,438 | 0 | 0 | 15,703 |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2011. 5. | 97,362 | -22,512 | -14,185 | -7,100 | -7,010 ³⁾ | 46,555 |
| 2011. 6. | 102,139 | -30,190 | -18,428 | -3,938 | -7,010 | 42,573 |
| 2011. 7. | 99,354 | -30,028 | -18,764 | -2,628 | -7,010 | 40,924 |
| 2011. 8.~9. | 149,207 | -67,516 | -31,002 | -2,684 | -7,010 | 40,995 |
| 2011. 10. | 222,563 | -24,882 | -11,997 | -1,832 | -7,319 | 176,533 |
| 2011. 11. | 94,174 | -28,759 | -17,968 | -686 | -7,319 | 39,442 |
| 2011. 12. | 141,791 | -34,268 | -16,114 | -5,584 | -7,319 | 78,506 |
| 합계 | 1,870,001 | | | | | 747,876 |

4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747,87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57,272원 (= 17,312원 + 15,703원 + 15,703원 + 48,297원 + 15,703원 + 44,554원)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1. 7. 6.부터, 590,604원(= 747,876원 - 157,272원)에 대하여는 2012. 1. 2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2. 1. 5.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. 10. 9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.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욱

2) 12,522원 × 30,000원 / 67,777원, 이하의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함.

3) 28,920원 × 50,000원 / 206,256원, 이하의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함.

판사 김수정

판사 박정진